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박종민*

장용진**

본 논문은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는 시민권의 차원에 따라 다른데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관계가 없으나 태도 혹은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는 시민권의 질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규범, 태도 및 행태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수준이 통제된 상황에서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에 주는 상대적 영향이 상이한데 규범 및 태도 차원은 독립적 영향이 없지만 행태 차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정부가 효과적이고 법을 지키며 부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수동적 시민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공화주의나 사회자본론이 옹호하는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의 덕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시민의 정치적 및 사회적 적극주의가 “좋은 정부”의 주요한 조건임을 밝히면서 “좋은 정부”를 가져오는데 있어 공정한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부의 질, 시민권이론, 시민문화론, 사회자본론, 시민적극주의

*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이론, 정부의 질 등이다(cmpark@korea.ac.kr).

** 아메리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21아시아행정학허브사업단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내부고발자보호, 행정윤리, 정부의 질, 인사정책 등이다(yongjinchang@gmail.com).

I. 머리말

본 논문은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있어 “좋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좋은 시민”이 적거나 없어도 공정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면 민주주의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와 절차가 공정하다면 설사 개인 각자가 공동선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해도 하나의 사익이 다른 사익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에 대해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와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민덕목과 공공정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이나 시민공화주의자들은 시민의 협력, 절제 및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고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Kymlicka & Norman, 1994).

시민권의 질에 대한 관심은 공공문제에 무관심하고 사적인 일에 몰두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동료 시민들을 신뢰하고 배려하는 시민들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지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연대의식의 쇠퇴, 사회적 이기주의의 확산, 공동체 의식의 약화, 사회신뢰의 감소, 정치관심 및 참여의 축소 등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민의식과 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감을 지적하고 있다(van Deth, 2007). 이들 연구가 시민권의 질의 하락을 우려하는 것은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이 정치에서 떠나 있고 공공문제에 무관심하며 동료 시민들을 불신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부패하고 편파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이고 공공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동료 시민들을 신뢰하고 법을 지키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투명하고 불편부당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관점에서 본 논문은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수준에서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선행이론과 연구를 통해 “좋은 시민”에게 기대되는 자질과 활동이 무

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규범, 태도 및 행태 차원으로 구분해 시민권의 질을 개념화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개념화와 측정 문제를 다루고 분석에서 사용될 자료를 소개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규범, 태도 및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과 효과성, 법의 지배 및 부패통제로 조작화된 정부의 질 간의 관계를 국가수준에서 분석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을 담보하는지를 살펴본다.

Ⅱ. “좋은 시민”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qualities)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역할을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와 시민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van Deth,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다루는 “좋은 시민”의 특성은 민주적 시민권(democratic citizenship)의 자질과 활동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을 연결시키는 이론은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이론에 주목한다. 첫째 시민문화론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에 긴요한 시민의 정치정향으로 정치적 적극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 둘째 사회자본론은 민주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단체참여와 사회신뢰를 강조한다. 셋째 시민권이론은 규범적 논거에서 근대민주주의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제시한다.¹⁾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론을 중심으로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을 정리하고 분석틀을 발전시킨다.

1) 권리와 책임이 모두 포함된 “citizenship”을 권리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시민권”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포함하며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활동으로서의 시민권도 포함한다.

1. 시민문화론

Almond & Verba(1963)는 5개국 정치문화 비교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시민문화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정치체제 전체, 투입과정, 산출과정 및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정향이 각각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치문화를 鄉里형, 臣民형 및 參與형으로 구분하였다. 향리형 정치문화에는 이들 각 대상에 대한 정향이 존재하지 않고, 신민형 정치문화에는 정치체제와 산출과정에 대한 정향만 존재할 뿐 투입과정과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향이 존재하지 않으며, 참여형 문화에는 이들 모든 대상에 대한 정향이 존재한다. 그들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시민문화는 이들 문화요소들이 모두 공존하는 혼합형 정치문화이다. 즉, 시민문화는 “정치적 능동성, 관여 및 합리성이 존재하지만 수동성, 전통성 및 향리주의 가치에 의해 균형을 이룬” 정치문화라는 것이다. 시민문화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모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위에 향리형 및 신민형의 정향이 가미되어 있다. 시민문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시민”은 법을 준수하고 정부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자본론

사회자본론은 민주주의의 효과적 운영에 있어서 시민공동체의 질에 주목한다. Putnam (1993)은 이태리를 대상으로 효과적 민주제도의 조건을 탐색하면서 경제 수준보다 사회신뢰와 사회연결망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사회자본은 “조정된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의 능률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다. 신뢰는 사회구성원들이 동료 시민들에 대해 갖는 집합적 태도이며 연결망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유형이다. 그에 의하면 자발적 단체를 매개로한 조밀한 상호작용이 일반화된 신뢰를 생성하고 이는 공동이익을 위한 집합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민주제도의 반응성과 효과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Fukuyama, 1995). 민주주의에 긴요한 마음의 습관이 자발적 단체에서 일어나는 교차적, 수평적 및 대면적인 사회

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보면 “좋은 시민”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하고 친척이나 친구를 넘어 낯선 사람들을 신뢰하고 배려하며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3. 시민권이론

규범적 시민권이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건전성과 안정이 공정한 제도와 절차만이 아니라 시민의 자질과 행위에도 의존함을 강조한다(Kymlicka & Norman, 1994). 정통적 시민권이론의 대표격인 Marshall(1950)은 시민권의 권리를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 구분하고 시민권의 권리 확대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시민권의 개념은 수혜권리와 의무부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동적” 혹은 “사적” 시민권으로 간주된다.²⁾ 보다 근래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시민공화주의자들은 정치참여의 덕목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좋은 삶”이란 정치적 삶이며 “좋은 시민”은 사적 문제보다 공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이다. 공동체주의자들 혹은 시민사회론자들은 개인책임, 상호의무, 절제의 덕목을 강조한다. 이러한 덕목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단체를 통해 학습되며 따라서 “좋은 시민”의 활동에는 사회참여가 포함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하지만 시민권에 대한 일부 자유주의적 해석은 준법성이나 충성과 같은 일반적 덕목뿐만 아니라 정부비판능력이나 공론참여와 같은 정치적 덕목을 강조한다(Galston, 1991).³⁾ 정통적 시민권의 개념을 넘어 이들 다양한 규범이론들이 정당화하는 “좋은 시민”의 덕목에는 정치참여, 사회참여, 연대 의식, 권위비판, 공론참여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Marshall(1950)의 시민권 개념에 따르면 시민권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New Right)는 시민을 수동적 피부양자로 전락하도록 만든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를 비판하고 자기책임과 자립자족의 덕목을 강조한다.

3)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한 자유주의자들이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을 조성한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시민덕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Galston(1991)은 책임감 있는 시민권에 요구되는 덕목으로 일반적 덕목, 사회적 덕목, 경제적 덕목 및 정치적 덕목을 구분해 제시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권위를 의심하는 능력과 공적 담론에 관여하는 자세는 자유주의 덕목이론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4. 시민권의 질: 다차원성

전술한 것처럼 무엇이 “좋은 시민”의 핵심적 특성인지는 이론적 시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 모형은 시민과 정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 공론형성에 관여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자세 등의 정치적 덕목을 강조한다. 한편, 공동체주의 모형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연대성, 공동체 참여, 관용, 신뢰와 같은 시민덕목을 강조한다. 고전적 참여모형 혹은 시민공화주의 모형은 자유주의 모형과 달리 정치적 삶을 이상화하고 본질적 가치로서의 정치참여를 옹호한다. 이들 이론이 강조하는 자질과 행동을 고려하면 “좋은 시민”은 사적 문제에 몰입되어 공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다. 또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료시민들을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이다. 또한 자립정신과 자기책임 의식이 투철하며 사익을 무분별하게 추구하기보다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이다. 그리고 정부권위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감시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공론형성을 위해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이다.⁴⁾ 이들 “좋은 시민”의 특성들은 서로 갈등할 수 있지만 시민권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시민권 규범(citizenship norms)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역시 “좋은 시민”의 특성이 다차원적임을 보여준다. Denters et al.(2007)은 유럽 13개국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해 유럽인들이 시민권의 규범을 연대성(자신보다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연대감을 보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심의능력(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이 비판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준법성(법과 규정을 항상 준수하고 탈세를 시도하지 않는 것)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Dalton(2008)은 미국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해 좋은 시민권의 두 얼굴을 기술하면서 미국인들이 지지하는 시민권이 의무기반(duty-based) 시민권(범죄를 신고하고 법을 지키며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 등)에서 참여적(engaged) 시민권(못사는 사람들

4) Conover et al.(1991)은 시민권에 대한 이해가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시민권을 주로 시민적 권리로, 영국인들은 주로 사회적 권리로 이해하고 있었고 정치적 권리는 다른 권리들만큼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 않았다.

을 돕고 정치에 적극적이고 자발적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 등)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이들 연구는 규범만을 다루었지만 시민권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차원별로 시민권의 질이 “좋은 정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시민권의 차원은 “좋은 시민”의 특성의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규범이론이 옹호하는 “좋은 시민”의 규범적 정향만이 아니라 경험연구가 발견한 “좋은 시민”의 태도와 행태도 포함하기 때문에 “좋은 시민”의 특성을 규범, 태도 및 행태 차원으로 구분하려고 한다(van Deth, 2007).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규범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 갖고 있는 태도나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민권의 질은 이상과 실제의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이론과 연구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규범, 태도 및 행태 차원의 “좋은 시민”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는 정치참여이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그들의 선호가 정부가 내리는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성은 공론형성을 위한 심의참여와 권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이다. 시민들이 정부권위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공론형성을 위한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좋은 정부”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성은 준법성이다. 시민들이 국가의 정당성을 수용하지 않고 법을 지키려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정치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좋은 정부”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성은 연대성이다. 시민들이 다른 동료시민들에 대해 신뢰와 포용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전술한 이론과 연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문화론은 정치적 효능성이 높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이면서 권위를 존중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참여적이지 않고 권위에 불응한다면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자본론은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대인신뢰가 높은 “좋은 시민”의 특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서로 배려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민주제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를 감시하고 공적 토론에 합리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정부

권위에 비판적이지 않고 공론형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이론에서 도출될 수 있는 국가수준의 관찰적 함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부의 질이 더 좋다는 기대이다. 즉, 공공문제에 무관심하고 정부권위에 비판적이지 않고, 공공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공론형성에 참여하지 않고 동료시민들을 불신하고 다른 시민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사적 일에만 집중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부의 질이 낮다는 기대이다.

Ⅲ. 측정과 자료

1. 종속변수: 정부의 질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의 질이다. 정부의 질은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르며 기준은 “좋은 정부”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화와 차원 구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Langbein & Knack, 2010) 현재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는 거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통해 “좋은 정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한다(Kaufmann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좋은 정부”는 효과적인 정부, 준법적인 정부, 그리고 부패가 통제된 정부이다. 공적 권한이 행사되는 관행과 제도로서 정의된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는 모두 6개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법의 지배(rule of law) 및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3개 차원을 통해 정부의 질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 측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투입 측면이 강조된 “참여와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 그리고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 차원은 포함하지 않았고, 규제가 적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차원도 제외하였다(La Porta *et al.*, 1999). 정부의 효과성은 공공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 그리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정부기관이 사회규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를 잘 준수하는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범죄나 폭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계약집행, 재산권, 경찰, 그리고 법원의 질까지도 포함된다. 부패의 통제는 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광범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거버넌스 지표를 사용하였다. 각 지표의 범위는 -2.5 에서 +2.5이다.

2. 영향변수: 시민권의 질

시민권의 질은 “좋은 시민”의 특성을 규범, 태도 및 행태 차원으로 구분한 후 각 차원별로 측정하였다. 자료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2004년 시민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얻었다.

1) 규범 차원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준법성, 공론참여, 단체참여, 연대성 규범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각 규범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좋은 시민이 되는데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7점(매우 중요하다) 사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결코 탈세하려고 하지 않는다. ② 법과 규칙을 항상 지킨다. ③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 ④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⑥ 국내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 국가별 준법성 규범에 대한 지지는 ①과 ② 각각에 대해 6점 혹은 7점을 준 응답자의 퍼센트의 평균값으로 추산하였다. 국가별 공론참여 규범에 대한 지지는 ③과 ④ 각각에 대해 6점 혹은 7점을 준 응답자의 퍼센트의 평균값으로 추산하였다. 국가별 단체참여 규범에 대한 지지는 ⑤에 대해 6점 혹은 7점을 준 응답자의 퍼센트로 추산하였다. 끝으로 국가별 연대성 규범에 대한 지지는 ⑥에 대해 6점 혹은 7점을 준 응답자의 퍼센트로 추산하였다.

2) 태도 차원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신뢰, 관용,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효능성의 측면에

서 파악하였다. 첫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범주는 “① 항상 신뢰할 수 있다. ②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③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④ 항상 조심해야 한다.”이다. 국가별 신뢰의 수준은 ① 혹은 ②를 선택한 응답자의 퍼센트로 추산하였다. 둘째, 관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2개 질문을 사용하였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개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①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② 허용해야 한다. ③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당연히 허용해서는 안된다.”이다. 국가별 관용의 수준은 각 문항에 대해 ① 혹은 ②를 선택한 응답자의 퍼센트의 평균값으로 추산하였다. 셋째, 정치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응답범주는 “① 매우 있다. ② 다소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이다. 국가별 정치적 관심의 수준은 ① 혹은 ②를 선택한 응답자의 퍼센트로 추산하였다. 넷째, 정치적 효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동의-부동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국가별 정치적 효능성의 수준은 ‘매우 그렇다’ 혹은 ‘다소 그렇다’고 한 응답자의 퍼센트로 추산하였다.

3) 행태 차원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정치참여와 사회참여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혹은 그 이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① 진정서에 서명하기. ② 정치적, 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어떤 상품을 불매하거나 사주기. ③ 시위에 참가하기. ④ 정치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기. ⑤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기. ⑥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 ⑦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에 접촉하거나 출연하기. ⑧ 인터넷의 정치공개토론이나 토론모임에 참여하기. 국가별 정치참여의 수준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치행동의 수의 평균값으로 추산하였다. 둘째,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단체에 가입한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① 시민사회단체. ② 노조, 사업자 단체 또는 직

업 조합. ③ 종교단체, ④ 스포츠, 레저모임 등 문화단체. ⑤ 동창모임. ⑥ 향우회. ⑦ 친목단체. ⑧ 기타 단체. 국가별 사회참여의 수준은 참여한 단체의 수의 평균값으로 추산하였다.

3. 통제변수: 경제발전수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시민들이 “좋은 시민”의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나라가 “좋은 정부”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에서 경제발전수준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인당 국민소득(미국달러표시)을 사용하여 국가별 경제발전수준을 측정하였다.

4. 분석대상국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ISSP 2004년 조사대상국인 38개국 가운데서 2004년 Freedom House로부터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거버넌스 자료가 없는 플랑드르(Flanders)를 제외한 총 35개국이다. ISSP의 일부 질문이 누락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는 일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국가별 각 변수의 값은 부록 참조).

IV. 분석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좋은 시민”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 1>에 따르면 첫째 규범 차원의 “좋은 시민”의 특성들 간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특히 연대성 규범을 지지하는 시민이 많은 나라는 다른 규범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규범 차원의 특성과 다른 차원의 특성들 간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이 높은 나라라고 행태 혹은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이 높은 것이 아니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준법성의 규범이나 단체참여의 규범을 지지하는 시민이 많은

나라일수록 신뢰하는 시민이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이다.⁵⁾ 한편 공론참여 규범을 지지하는 나라일수록 관용이나 정치적 효능성이 높았다.

둘째, 태도 차원의 “좋은 시민”의 특성들 간에는 관용만 제외하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 효능성이 있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태도 차원의 특성이 규범 차원의 특성과는 관계가 없지만 행태 차원의 특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신뢰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효능성이 있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셋째, 행태 차원의 “좋은 시민”의 특성들 간에는 유의미한 강한 관계가 있다. 즉 선거 이외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행태 차원의 특성은 규범 차원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관용을 제외한 태도 차원의 특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적 관계는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시민권의 질을 규범, 태도 및 행태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1> “좋은 시민”의 특성: 단순상관분석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규범-준법성(I)	.43*	Ns	.38*	-.37*	Ns	Ns	Ns	Ns	Ns
규범-공론참여(II)		.65**	.73**	Ns	.38*	Ns	.38*	Ns	Ns
규범-단체참여(III)			.83**	-.35*	Ns	Ns	Ns	Ns	Ns
규범-연대성(IV)				Ns	Ns	Ns	Ns	Ns	Ns
태도-신뢰(V)					Ns	.36*	.51**	.74**	.70**
태도-관용(VI)						Ns	.50**	Ns	.39*
태도-정치관심(VII)							.33*	.57**	.38*
태도-정치효능(VIII)								.57**	.49*
행태-정치참여(IX)									.72**
행태-사회참여(X)									-

Ns: Not significant. * p<.05 ** p<.01 *** p<.001. N=34-35.

5) 혹은 신뢰하는 시민들이 적은 나라일수록 준법성이나 단체참여를 시민권의 규범으로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표 2>는 국가수준에서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무관하고 일부는 뜻밖에도 부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성의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공론참여의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연대성의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부가 더 효과적이거나 더 준법적이거나 혹은 덜 부패한 것은 아니었다. 보다 의외인 것은 단체참여의 규범을 강조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오히려 정부가 덜 효과적이고 덜 준법적이며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정부의 질이 전반적으로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과 무관하며 혹 관계가 있다면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체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정당화하는 시민덕목이 “좋은 정부”에 기여하지 않는다고보다 시민덕목에 대한 지지가 말로만의 지지일 경우 정부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즉, 말로는 준법성, 공론참여, 단체참여, 연대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의 태도와 행태가 그러한 규범적 정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규범에 대한 지지가 “좋은 정부”의 구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혹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관계의 방향과는 달리 정부가 덜 효과적이고 덜 준법적이며 더 부패할수록 시민들이 “좋은 시민”의 규범적 특성을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전술한 분석 결과는 시민덕목에 대한 규범적 지지 그 자체가 정부의 질을 담보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둘째,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더 준법적이며 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치를 이해한다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는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단적인 사람들을 포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와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 간에는 정부의 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자본론 혹은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덕목 가운데 사회신뢰가 정부의 질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시민공화주의나 시민문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관심이나 정치적 자신감도 정부의 효과성이나 반부패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에는 유의미한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보다 혹은 사회참여가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보다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더 준법적이며 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민공화주의나 시민문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의 정치적 적극주의가 정부의 질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체주의나 사회자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의 사회적 적극주의 역시 정부의 질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적 문제에 무관심한 개인주의(privatism)나 사회적 이기주의가 “좋은 정부”를 훼손하고 민주제도를 약화시킨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 2>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단순상관분석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규범			
준법성	-.24	-.28	-.22
공론참여	.10	-.06	.06
단체참여	-.47**	-.62***	-.54***
연대성	-.27	-.40*	-.28
태도			
신뢰	.73***	.67***	.69***
관용	.23	.06	.16
정치적 관심	.42*	.39*	.41*
정치적 효능성	.43*	.36*	.46**
행태			
정치참여	.82***	.73***	.78***
사회참여	.68***	.63***	.67***

* p<.05 ** p<.01 *** p<.001. N=34-35.

전술한 단순상관 분석결과는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의 특성이 규범적 정향보다 실제적인 태도 혹은 행동임을 보여준다. 규범에 대한 지지가 실제의 태도와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민”의 특성을 지지하는 것

만으로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시민”의 태도를 시민들이 실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시민”의 행동을 시민들이 실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다. 실제 동료 시민들을 신뢰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를 이해할 능력이 있고 실제 정치과정에 적극적이고 단체 활동에 열심인 시민들이 많아야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더 준법적이고 덜 부패하기 때문이다.

각 차원의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에 주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 수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차원의 “좋은 시민”의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시민권의 질을 각 차원별로 통합하여 설명변수로 삼았다.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준법성, 공론참여, 단체참여, 연대성 규범을 지지하는 퍼센트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신뢰, 관용,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성을 나타낸 퍼센트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정치참여와 사회참여의 수준을 단순 합하여 측정하였다. 통제변수인 경제발전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의 로그 값을 취하여 측정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경제수준이 통제된 후에도 정부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규범 및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다른 차원의 정부의 질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법의 지배의 경우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경제수준이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규범이나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부패통제의 경우에도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경제수준이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규범이나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단순상관분석과 달리 다중회귀분석에서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태도 차원과 행태 차원 간의 밀접한 관계($r=.785$)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태도가 행태에 영향을 주는 한도에서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을 매개해 정부의 질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⁶⁾

6) 앞서 제시했지만 관용을 제외하고 신뢰가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보다, 정치적 효능이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보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보다 정치참여 및 사회참여가 높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수준은 각 차원의 시민권의 질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정부의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시민권의 질이 높은 낮은 이와 무관하게 잘사는 나라의 정부가 못사는 나라의 정부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준법적이며 덜 부패함을 보여준다. 물론 인과적 방향의 모호성으로 거꾸로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더 준법적이며 덜 부패할수록 경제수준이 더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3>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다중회귀분석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시민권의 질			
규범 차원	-.001(.007)	-.006(.006)	-.004(.008)
태도 차원	-.004(.009)	-.012(.008)	-.005(.011)
행태 차원	.267(.066)**	.187(.072)*	.264(.104)*
경제수준			
로그(1인당국민소득)	.759(.229)**	1.101(.192)***	.264(.104)**
Adjusted R-square	.76	.83	.68

기재된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5 ** p<.01 *** p<.001. N=33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는 “좋은 시민”의 특성 가운데서 정치적 및 사회적 적극주의가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보고 다른 차원의 시민권의 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과 태도 차원의 시민권의 질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사회 및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그런 시민들이 적은 나라보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시민들보다 그러한 규범이 반영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Theiss-Morse, 1993). 그럼에도 국가수준에서 규범 차원과 태도 혹은 행태 차원들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마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규범적 정향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향으로 응답하였거나 혹은 특정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특정 사회가 처한 맥락을 반영했기 때문일 수 있다.⁷⁾

V. 맺음말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는 양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좋은 정부”의 존재가 “좋은 시민”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시민”의 존재가 “좋은 정부”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Hooghe & Stolle, 2003).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서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있어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이론과 연구는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수행해야 할 활동을 제시한다. 시민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정부권위에 대한 비판능력과 공론형성을 위한 심의참여를 정치적 덕목으로 강조한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책임, 상호의무, 자발적 절제의 덕목을 강조한다. 시민공화주의는 정치적 삶을 “좋은 삶”으로 이상화하면서 정치참여의 덕목을 강조한다. 시민문화론은 체제에 대한 충성과 더불어 참여적 정향을 강조한다. 사회자본론은 신뢰와 관용 및 단체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 이론과 연구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긴요한 “좋은 시민”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는 이를 시민권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규범 차원의 시민권은 준법성, 공론참여, 단체참여 및 연대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태도 차원의 시민권은 신뢰, 관용,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효능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행태 차원의 시민권은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정부의 질은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및 부패통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ISSP 2004년 시민권 설문조사자료와 2004년 거버넌스 지표를 사용해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을 국가수준에서 측정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는 시민권의 차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와는 달리 태도 혹은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대체로 정부의

7) 오래된 민주주의(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시민들보다 새로운 민주주의(슬로베니아, 몰도바, 루마니아)의 시민들이 시민권의 규범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는 발견(van Deth, 2007)은 각국이 처한 맥락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증하며 규범 차원의 시민권의 질과 정부의 질 간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행태 차원의 시민권의 질은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및 부패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권의 질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규범, 태도 및 행태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좋은 시민”이 지향해야 할 규범을 지지한다고 반드시 그러한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립 서비스에 그칠 수도 있다.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규범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그를 반영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시민권의 질이 정부의 질에 주는 상대적 영향은 상이한데 규범 및 태도 차원은 독립적 영향이 없지만 행태 차원은 경제수준이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정부가 효과적이고 법을 지키며 부패가 적었다. 이러한 발견은 시민공화주의나 사회자본론이 강조하는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의 덕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정치참여가 선거참여 이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정부에 대한 비판능력과 공론 형성을 위한 심의참여 등의 정치적 덕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논거와도 부합한다. 분명한 것은 고전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수동적 시민권만으로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민권, 사회자본, 시민사회 등에 대한 논의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데 있어 공정한 제도와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좋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통치되기 어렵고 심지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좋은 시민”의 태도와 행태가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및 부패통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정부”는 태도와 행태 차원에서 “좋은 시민”의 특성을 보여주는 시민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부분적으로 의존하였다. 특히 시민의 정치적 및 사회적 적극주의가 “좋은 정부”의 주요한 조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을 신뢰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활동에 적극적이고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또 그나마 감소하고 있다는 발견(Theiss-Morse & Hibbing, 2005)은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일 것이다.

▣ 참고문헌

- Almond, G. and S.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Little, Brown.
- Conover, P., I. Crewe, and D. Searing. 1991. “The Nature of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Empirical Comments on Theoretical Themes.” *Journal of Politics* 53(3): 800-832.
- Dalton, R. 2008.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56: 76-98.
- Denters, B. O. Gabriel and M. Torcal. 2007. “Norms of Good Citizenship.” In J. van Deth, J. Montero and A. Westholm, eds. *Citizenship and Involvement in European Democracies: A Comparative Analysis*, 88-108. London: Routledge.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Galston, W. 1991. *Liberal Purposes: Goods, Virtues, and Duties in the Liberal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oghe, M. and D. Stolle, eds. 2003.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 Kaufmann, D., A. Kraay and M. Mastruzzi. 2008. “Governance Matters VI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7.”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654, Washington, D.C.
- Kymlicka, W. and W. Norman. 1994. “Return of the Citizens: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ics* 104(2): 352-381.
- Langbein, L. and S. Knack. 2010.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Six, One, or Non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6(2): 350-370.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 Vishny. 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15(1): 222-279.
- Marshall, T.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iss-Morse, E. 1993. “Conceptualizations of Good Citizen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15(4): 355-380.
- Theiss-Morse, E. and J. Hibbing. 2005. “Citizenship and Civic Engagement.” *American Review of Political Science* 8: 227-249.
- van Deth, J. W. 2007. “Norms of Citizenship.” In R. Dalton and H.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402-4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국가별 독립, 중속 및 통제변수

국가	준법성 (%)	공론 참여 (%)	단체 참여 (%)	연대성 (%)	신뢰 (%)	관용 (%)	정치 관심 (%)	정치 효능 (%)	정치 참여 (유형수)	사회 참여 (단체수)	정부 효과성 (점수)	법의 지배 (점수)	부패 통제 (점수)	국민소득 (US\$)
Australia	82	72	25	67	55	23	59	69	2.77	1.30	2.023	1.748	2.010	29,712
Austria	71	58	26	74	60	7	58	60	3.21	1.76	1.815	1.776	2.014	34,627
Brazil	72	68	43	87	25	NA	22	57	1.32	0.74	0.143	-0.327	0.106	3,182
Bulgaria	85	42	17	53	19	3	56	52	0.85	0.19	0.092	0.028	0.250	3,059
Canada	85	76	27	63	57	29	55	64	3.23	1.77	1.900	1.689	1.814	30,439
Chile	83	63	37	88	12	14	34	35	1.00	0.75	1.265	1.235	1.484	5,571
Cyprus	78	47	33	61	69	39	30	79	1.93	0.51	1.162	0.91	0.940	18,098
Czech	63	29	12	31	50	19	36	33	1.28	0.64	0.800	0.797	0.508	10,058
Denmark	75	60	16	59	77	31	63	72	3.02	2.48	2.237	1.878	2.295	43,896
Finland	72	42	6	44	56	39	35	55	2.32	1.90	2.143	1.865	2.311	34,318
France	67	52	28	53	37	20	59	51	3.07	1.12	1.821	1.444	1.407	32,153
Germany	70	53	15	54	47	8	69	63	2.83	1.03	1.538	1.575	1.825	32,404
Great Britain	85	55	10	49	47	30	51	53	2.12	0.99	1.855	1.594	1.882	35,505
Hungary	76	41	12	38	47	14	34	33	0.54	0.52	1.044	0.966	0.813	10,015
Ireland	80	67	25	73	50	29	53	73	2.22	1.77	1.616	1.474	1.371	43,862
Israel	83	72	34	80	37	46	58	63	1.79	0.91	1.159	0.828	0.961	17,165
Japan	83	55	15	41	32	7	66	28	1.51	0.48	1.352	1.251	1.237	36,184
Latvia	67	40	15	51	22	13	32	33	1.54	0.77	0.721	0.647	0.310	5,633
Mexico	80	73	49	85	48	27	46	41	1.60	1.36	0.146	-0.316	-0.225	6,377
Netherlands	62	65	18	52	58	17	53	69	2.90	1.51	2.02	1.706	1.933	34,836
New Zealand	79	58	14	48	57	45	61	69	3.02	1.35	1.965	1.811	2.286	23,120
Norway	68	58	21	55	73	36	65	60	2.79	1.92	2.084	1.900	1.906	52,861
Philippines	82	74	59	79	16	37	60	53	0.78	0.78	-0.23	-0.59	-0.531	1,019
Poland	82	61	25	67	16	19	34	60	0.64	0.84	0.500	0.549	0.329	5,912
Portugal	81	67	37	75	33	11	40	46	1.85	0.64	1.113	1.230	1.187	16,021
Slovakia	80	45	14	53	34	14	48	42	1.89	0.65	0.830	0.614	0.583	7,329
Slovenia	66	50	16	62	32	29	36	46	1.35	1.16	1.026	1.022	1.167	16,439
South Africa	77	NA	49	72	31	35	34	48	NA	NA	0.746	0.144	0.397	3,687
South Korea	78	56	27	50	37	19	56	35	1.57	0.82	1.017	0.842	0.439	13,806
Spain	76	58	30	74	47	17	32	53	2.06	0.68	1.390	1.165	1.348	23,447
Sweden	68	66	11	46	66	30	47	47	2.72	1.99	2.059	1.817	2.069	37,363
Switzerland	57	50	22	55	65	17	58	60	2.71	1.54	2.139	1.818	1.923	47,493
Taiwan	82	53	22	60	24	21	23	49	1.04	0.84	1.077	0.960	0.829	13,359
United States	85	71	30	70	48	56	70	74	2.73	1.40	1.855	1.412	1.741	39,991
Uruguay	82	74	42	86	38	31	47	51	2.25	0.82	1.800	0.460	0.805	3,489

출처) 2004 ISSP-Citizenship;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04; IMF 200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